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19면	[강원포럼] K-연어 산업화로 수산 강국 도약	1
江原日報	12면	강릉시 보육인의 밤	2
강원도민일보	19면	"동계스포츠 메카 강원 저력 재확인 기회"	3
강원도민일보	19면	"2024 강원대회, 꿈과 희망의 올림픽"	3
강원도민일보	03면	"도민 감사제-고충처리위 업무 중복 실효성 떨어져"	4
江原日報	03면	"도민감사관 형식적 운영 안돼"	5
江原日報	03면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 지원 자치도의회 조례안 수정 가결	5
스포츠서울	온라인	원미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조례 개정 대표발의' 강원 맨...	6
위클리오늘	온라인	강원도의회 원미희 의원, 강원 맨발 걷기 활성화 기틀 마련	7
江原日報	03면	자치도의회 사문위 예산안 심사	8
강원도민일보	03면	도의회 인사청문 대상 6곳 선정 "출자·출연금 비중 큰 곳"	9
KBS 춘천	온라인	여성 농업인 복지·농업 연구 예산 줄삭감에 우려	10
MBC 강원영동		귀농 청년 육성한다더니...예산 줄줄이 삭감[1/2]	11
江原日報	21면	보탬·나눔의 김장처럼 강원2024 성공 개최 기원	13
江原日報		[포토뉴스]홍천군 성탄트리 점등 감사예배	14
강원도민일보	01면	강원·제주·세종·전북 연대 대한민국 지방시대 연다	15
강원도민일보	02면	시·도지사 '연대' 강조 ... 정치권 '입법 지원' 약속	16
강원도민일보	03면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	16
江原日報	04면	"전자철판 지원사업 논란, 도교육감 책임져야"	17
강원도민일보	01면	북 동부전선 GP 복원 한반도 군사 긴장 고조	17
강원도민일보	06면	북, 9·19 합의로 파괴한 GP에 병력 투입·감시소 설치	18
江原日報	01면	허리띠 졸라매는 지자체 ... 강원경제 직격탄	18
KBS 강릉	온라인	배스·블루길·브라운송어까지...외래종에 잠식된 소양강	19
강원도민일보	08면	춘천시 기업혁신파크 공모 실사 준비 총력	20
강원도민일보	08면	춘천시 민원행정 종합평가 '최우수상'	20
강원도민일보	17면	[사설] 농촌-대도시 의료 불평등 해소를	21
강원도민일보	17면	[사설] 강원 자치경찰제 연착륙해야	22

江原日報	19면	[사설] 수도권 기업 유치, '양보다 질'을 철저히 따져야	23
江原日報	19면	[사설] 활개 치는 보이스피싱, 뿌리 뽑을 근본 대책 없나	24

2023 11 28 ()

19

江原日報

해양수산 강국의 꿈이 현실화되고 있다. 바로 K-연어의 산업화를 통한 글로벌 강원특별자치도로의 도약이 그것이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진행하고 있는 강원형 K-연어 산업화는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최대, 최고다. 강원형 K-연어 산업화는 1단계로 2030년까지 연어 스마트 양식체계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2단계 연어 융·복합산업생태계 조성 사업은 2035년까지, 그리고 2040년까지 3단계 연어 수출 활성화 및 세계화사업이 진행된다. 3단계까지 사업이 완료될 경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연간 20만 톤을 생산하는 세계 5대 연어 생산국으로 도약하게 된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총 400억원을 투입하여 2030년까지 진행될 1단계 사업이다. 조만간 공사에 들어가 2024년에 완공될 테스트 베드 조성사업과 2025년까지 양양군 현북면·손양면에 들어서는 연어 양식산업단지 사업이 추진된다. 연어 테스트 베드 조성사업은 강릉시 연곡면에 연어 양식기술 연구와 R&D, 육종연구시설에서 기업의 실증·실험 검증과 인력 양성 등 연어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양양군에 조성되는 연어 양식산업

강원포럼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단지에는 연어 양식과 가공·유통, 관련 장비와 장치, ICT 및 신소재 기업 등이 입주해 연어 강국의 시동을 걸게 된다.

전 세계 연어 시장 규모는 반도체 67조원 규모와 맞먹는 60조원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연어 480만 톤 가운데 약 80%인 380톤이 양식으로 생산되는 점을 감안할 때

K-연어 산업화로 수산 강국 도약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대서양 연어 양식사업과 산업화는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우리나라의 대서양 연어 수입 규모는 2010년 9,374톤, 6,891만 달러에서 2021년 6만2,730톤, 금액으로는 4억7,621만 달러로 최근 10년 사이 6배 넘게 늘었다.

이러한 연어 시장 규모의 폭발적 증가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대서양 연어 산업화에 청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어 양식산업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수입 물량의 30%가 강원형 K-연어로 대체되면서 연 4조3,000억원

의 경제 유발효과와 3만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강원형 K-연어 산업화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사업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와 해양수산부,

강릉시, 양양군, 그리고 지역대학, 국내 최고의 해양수산기업, 아이슬란드의 대서양 연어 수정란, 노르웨이의 세계적 연어 기업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글로벌+로컬) 프로젝트’라는 점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먹거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 지역인재 육성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기후 변화에 따른 어족자원의 고갈, 어업인구의 급감 등 잡는 어업의

한계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청정 동해안 수산업은 절박한 상황에 몰려 있다. 강원형 K-연어 산업화의 성공은 이러한 동해안 수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새로운 블루오션, 미래산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2040년 반도체, 자동차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고유 브랜드를 달고 전 세계 시장을 누빌 강원형 K-연어를 통해 해양수산 강국의 꿈이 완성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300만 도민과 함께 기원한다.

江原日報

2023 11 28 ()

12



◇강릉시어린이집연합회 주최 '2023 강릉시 보육인의 밤' 행사가 27일 강릉씨마크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김홍규 강릉시장,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기영 시의장, 김준래 민주평통강릉시협의회장 등 기관·단체장과 지역 보육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릉=최영재기자

강릉시 보육인의 밤

【강릉】강릉시어린이집연합회 주최 '2023 강릉시 보육인의 밤' 행사가 27일 강릉씨마크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보육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보육 교직원 6명에게 보육유공자 시장상이 수여됐고, 25명의 보육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진행됐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 교사 등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소중한 뜻을 모아 마련한 후원금을 희망강릉365 기부금으로 기탁하는 뜻깊은 행사도 마련됐다.

김미심 강릉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자공심과 책임감으로 늘 노고를 아끼지 않은 우리 지역의 모든 보육인께 감사드린다"며 "힘든 보육의 현장에서 더 어려운 이웃을 잊지 않고 마련한 성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란다"고 했다.

최영재기자 yj5000@

강원도민일보

2023 11 28 ()

19

“동계스포츠 메카 강원 저력 재확인 기회”

GANGWON 2024 강원도민과 함께 봄엽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강원대회 봄엽·성공개최 염원

김기홍 (원주·사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이본지 주관의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봄엽 캠페인-‘나에게, 청소년 올림픽이란!’에 참여해 2024강원대회 봄엽과 성



공 개최를 염원했다.

김 부의장은 ‘나에게, 청소년 올림픽이란!’의 의미에 대해 “강원의 저력을 또

한 번 보여드릴 시간”이라며 “강원이 동계스포츠 메카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킬 기회”라고 했다. 양유근

강원도민일보

2023 11 28 ()

19

“2024 강원대회, 꿈과 희망의 올림픽”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

“추운 날씨 속 청소년 희망되길”

한창수 (횡성·사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이본지 주관의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봄엽 캠페인-‘나에게, 청소년 올림픽이란!’에 참여, 2024 강원대회 봄엽 확산에 힘을 보탰다.

2024 강원대회 개최지 중 한 곳



인 횡성이 지역구인 한창수 부의장은 ‘나에게, 청소년 올림픽이란!’의 의미에 대해 “꿈과 희망의 올림픽”

이라고 적었다. 이어 “추워지는 날씨 속 청소년의 희망이 될 대회”라고 했다. 양유근

강원도민일보

2023 11 28 ()

03

“도민 감사제-고충처리위 업무 중복 실효성 떨어져”

기행위 임미선 의원 지적

강원도감사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도민 감사제와 관련, 도민 고충처리위원회 업무와의 중복성 등이 지적되며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길수)는 제324회 4차 회의를 열고 도민감사제 실효성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임미선(비례) 의원은 “도민감사제 제보 실적이 올해 336건이나 된다. 이 제도가 언뜻 보면 활성화된 것 같지만 실상을 보면, 불법 주차나 불법 현수막 철거 요청, 체육 시설 파손처럼 단순 민원 형식이다”라며 “관련조례를 정비하거나 이관 등 업무 분장을 확실히 하는 게 업무 효율성에 적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영곤(삼척) 의원은 “도민감사제를 운영하기 위해 예산이 매년 반



임미선

심영곤

한창수

복적으로 편성된 게 훤히 보인다”며 “예산이 4000만원인데, 연찬회나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내실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창수(횡성) 의원은 “감사관으로 임명된 이들 중엔 그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이 많다”며 “예산을 잘 활용하고 관리해 지역에 정말 필요한 감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열린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의원들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1억2000만원을 들여 새단장하는 홈페이지와 CI 제작 등과 관련해 철저한 예산 집행 등을 주문했다. 김현경·최우은

江原日報

2023 11 28 ()

03

“도민감사관 형식적 운영 안돼”

자치도의회 심의서 당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도 감사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도민감사관 제도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승순(국민의힘·강릉) 도의원은 27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4차 회의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동주 감사위원장은 “공감하고 개선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중”이라고 답했다. 임미선(국민의힘·비례) 도의원 역시 “제보 실적이 2022년도 278건, 올해 9월 기준 336건이나 되어서 언뜻 보면 활성화되어 보이지만 내용은 불법 현수막 철거 요청 등 단순 민원 형식이 많다”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江原日報

2023 11 28 ()

03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 지원 자치도의회 조례안 수정 가결

속보=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조례를 통해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들을 지원(본보 10월11일자 3면 보도)한다.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는 27일 김용래(국민의힘·강릉) 도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도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법률·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날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구분할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조항은 급발진 의심 사고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삭제돼 향후 대상자 선정이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과제로 남았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을 수정·확대하는 ‘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스포츠서울

원미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조례 개정 대표 발의' 강원 맨발 걷기 활성화 기틀 마련



원미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스포츠서울 춘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원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개정안은 기존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의 '걷는 길'에 맨발보행로를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을 통한 맨발 걷기 활성화와 도민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맨발 걷기는 어싱(Earthing)으로도 불리며, 신발과 양말을 벗고 맨발로 황토, 마사토 등 부드러운 흙길을 걷는 운동법이다.

맨발과 땅이 만나면 몸 안의 면역력이 높아져 각종 체내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증대된다고 알려졌다. 특히 만성염증 예방, 불면증 완화, 스트레스 저항력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면서 전국에서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맨발보행로를 포함하여 걷는 길의 정의를 상세하게 규정하였으며 입법평가에 따른 강원권 관광개발 계획 수립 관련 단서 조항 신설,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원미희 의원은 "맨발 걷기의 다양한 효과가 입증되며 전국적으로 맨발걷기 열풍이 불고 있는데 맨발 보행로는 그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맨발 보행로 조성이 활성화되어 관광인프라 확대 및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acdck4021@sportsseoul.com

2023 11 27 ()

강원도의회 원미희 의원, 강원 맨발 걷기 활성화 기틀 마련

박종성 기자



[강원 위클리오늘=박종성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원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개정안은 기존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의 '걷는 길'에 맨발보행로를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을 통한 맨발 걷기 활성화와 도민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맨발 걷기는 어싱(Earthing)으로도 불리며, 신발과 양말을 벗고 맨발로 황토, 마사토 등 부드러운 흙길을 걷는 운동법이다.

맨발과 땅이 만나면 몸 안의 면역력이 높아져 각종 체내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증대된다고 알려졌다. 특히 만성염증 예방, 불면증 완화, 스트레스 저항력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면서 전국에서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맨발보행로를 포함하여 걷는 길의 정의를 상세하게 규정하였으며 입법 평가에 따른 강원권 관광개발 계획 수립 관련 단서 조항 신설,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원미희 의원은 “맨발 걷기의 다양한 효과가 입증되며 전국적으로 맨발걷기 열풍이 불고 있는데 맨발 보행로는 그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맨발 보행로 조성이 활성화되어 관광인프라 확대 및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종성 기자 wknews005@daum.net

32

江原日報

2023 11 28 ()

03



자치도의회 사문위 예산안 심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 정재웅)는 2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24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갖고 도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했다. 원미희(국민의힘·비례)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lyano@kwnews.co.kr

2023 11 28 ()

강원도민일보

도의회 인사청문 대상 6곳 선정 “출자·출연금 비중 큰 곳”⁰³

운영위, 조례 원안대로 가결
강개공 등 4곳 추가·2곳 제외
“기관장 적합여부 검증 필요”

속보=강원개발공사를 비롯해 도경제진흥원, 강원관광재단, 강원문화재단 등 4곳 기관장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대상기관(본지 11월 21일자 1면)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기존 인사청문 대상이었던 한국여성수련원장과 강원도립대 총장은 청문대상에서 제외, 도의회 인사청문을 받는 도 산하기관은 총 6곳(기존 청문대상 강원연구원·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이 됐다. 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심영근)는 27일 제324회 2차 회의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운영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도의회 인사청문 기관으로 4곳을 새롭게 포함시키고 2곳을 제외시킨 것은 도의회와 도집행부 간 교감을 통해 추진됐다. 인사청문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된 강원개발공사는 도청 신청사 현안을 비롯해 강원도와 각 시군의 개발사업을 전담하고 있고, 도경제진흥원

은 경제 현안과 관련해 도본청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여기에 강원관광재단과 강원문화재단 역시 강원 관광과 문화를 전담하며 도와 각 시군 등과 각종 현안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관련, 도의회는 이들 기관이 예산 등 출자·출연금 비중이 큰 곳부터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영근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도에서 출자했거나 출연했다는 건 도민 혈세가 들어갔다는 의미가 있어 기관장 적합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청문회를 통해서 도지사가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을 추천했는지, 자리에 맞는 전문가가 맞는지 세세히 잘 분석하고 검토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청문 대상 기관에서 제외된 강원도립대는 도청 직속 기관인 점, 한국여성수련원은 타 기관보다 출자·출연금 액수가 낮은 점 등을 들어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위원장은 “타시도가 인사청문 제도 대상 기관을 늘려가는 추세인 만큼 우리도 점차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회는 협약으로 인사청문 근거를 규정해 왔으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제도가 법제화됐다. 김현경

2023 11 27 ()

KBS 춘천

여성 농업인 복지·농업 연구 예산 줄삭감에 우려

앵커

내년, 강원도 예산안에 여성 농업인 복지나 농업 연구 예산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의를 거부했고, 농민들도 지원 사업이 중단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철원에서 30년째 벼와 고추 등을 기르고 있는 김정희 씨.

최근, 식탁처럼 넓은 농작업대가 지원되면서 일하는 수고를 덜었습니다.

옆 마을에 들녘 화장실 설치도 시작돼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김정희/한국여성농업인강원도연합회 수석부회장 : "화장실에 제대로 볼 일을 볼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조심하면서 화장실을 다녀야 하는데 그게 너무 저의 자체는 조금 힘듭니다."]

내년 세수 감소가 예상되자, 강원특별자치도가 관련 사업비를 크게 줄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의회에 제출된 내년 농정국 예산안은 4,800여억 원.

전체 액수는 4.7% 늘었는데, 대부분 전국에서 하는 농업직불금 등 국비 사업이 늘었습니다.

농업인 복지나 농자재 지원 등 자체 사업비는 올해보다 270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농업기술 개발과 연구 예산 역시 올해보다 110억 원, 18% 감소했습니다.

대관령 고랭지농업 생산기술개발 등 50개 사업은 폐지되고, 70개 사업은 삭감될 처집니다.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농업기술원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며 예산안 심사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김용복/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 "연구원에서 해야될 일들이 점차 줄어들고, 예산 범주에 맞춰서 일을 하다보면 농가들에게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농수위는 특히, 강원도 산업에서 농업의 중요성이 큰 만큼 관련 예산 증액을 촉구하고 있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이청초

2023 11 27 ()

MBC 강원영동

귀농 청년 육성한다더니...예산 줄줄이 삭감

조규한

강원도 농업 정책과 지원을 맡고 있는
농업기술원의 내년 예산이
100억 원 넘게 삭감됐습니다.

강원도는 긴축재정으로 모든 분야에서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농업 분야에서만 100개 넘는 사업이
감액되거나 폐지돼
농업인들의 타격이 불가피해보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 귀농한 청년 농업인 이재호 씨.

청년을 대상으로 한 농업 교육을 통해
최신 영농 기법을 도입하려 했지만
교육 기회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내년 교육 예산이 8백만 원으로
올해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재호 청년 농업인
"교육이 있어야지만 좀 더 선진농업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거든요.
근데 그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도 좀 많이...
슬프죠."

자부담 10%를 내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초 영농 지원 사업도 신청하려 했지만
선정될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예산이 올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면서
18개 시군 전체 농가에서
10개 농가 정도만 지원 받게 됐습니다.

삭감된 예산이 이대로 확정되면
청년 농업인들만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농업 경영에 접목하기가
사실상 힘들어지게 됩니다.

강원도가 편성한 내년 농업기술원 예산은
491억 원, 올해보다 111억 원이나
삭감됐습니다.

50개 사업을 폐지하고
70개 사업의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농식품연구소를 비롯해
농업기술원 산하 조직 예산은 물론,
연구 인력 인건비까지 줄줄이 삭감했습니다.

강원도는 내년 긴축재정으로
농업기술원 예산은 18% 줄였지만
전체 농업 예산은
오히려 늘렸다는 입장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농업 예산) 5%면 그게 200억 원인가,
그 정도가 오히려 더 증액을
해드리고 있는데..."

하지만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예산 증액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속에
농업인의 어려움을 외면한 예산안이라 보고
예산 심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 예산을 늘렸더라도,
농업기술원 예산은
농업 현장에 지장을 줄 정도로
삭감됐다는 겁니다.

김용복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체감형 사업들이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항의도 좀 해야 되고,
다시 예산을 1회 추경 때라도
살릴 수 있게끔..."

농가 수익을 위한 시설 개선 비용부터
스마트농장과 같은 미래농업 예산까지..

전에 없던 예산 삭감 소식에
좀더 나은 내년을 준비하던
농업인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보탬·나눔의 김장처럼 강원2024 성공 개최 기원

국민대통합 김장나눔 행사 평창 진부서 진행
 도내 사회복지기관에 김치 200상자 전달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을 기원합니다.”
 ‘사람과 사랑이 한데 모여 국민대통합 김장나눔’ 행사가 27일 평창군 진부면 평창고랭지김장축제장에서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심재국 평창군수, 심현정 평창군의장, 최종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릉, 정선, 횡성 등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지역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졌다.
 이날 김장나눔 행사에서는 김장 담그기와 시식, 강원지역의 특색 있는 김치 소개, 강

원2024 성공 개최 퍼포먼스 등이 펼쳐졌다. 특히 기관·단체장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배추 500포기 1,000kg의 김치 10kg 200상자를 만들어 도내 곳곳의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했다.
 김순열 평창군새마을협의회장은 “우리나라 김장문화처럼 이웃과 함께하고 힘을 보태고 맛을 나누며 정을 느끼는 행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김장을 담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한다는 의미가 너무 좋아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김명선 부지사는 “날씨는 춥지만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

◇‘사람과 사랑이 한데 모여 국민대통합 김장나눔’ 행사가 27일 평창군 진부면 평창고랭지김장축제장에서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 심재국 평창군수, 심현정 평창군의장, 최종수 도의원, 강릉, 정선, 횡성 등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지역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길이 모여져 포근한 연말을 맛을 것 같다”며 “더불어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에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심재국 군수는 “오늘 김장을 담그는 배추는 평창산 고랭지 배추인데 맛과 영양이 훌륭하다”고 자랑하며 “김장 문화가 십시일반 힘을 보태 큰일을 치르는 우리나라의 전

통 미풍 양속인 것처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도 국민 모두 십시일반 힘을 보태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평창=조상원기자 jsw0724@

2023 11 27 ()

江原日報

[포토뉴스]홍천군 성탄트리 점등 감사예배



홍천군 기독교연합회 성탄트리 점등 감사예배가 26일 홍천읍 희망리 시외버스터미널 회전 교차로에서 신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홍천군의회장, 이영욱·홍성기 도의원, 최이경 군의회 부의장, 이광재·황경화 군의원, 허필홍 더불어민주당 홍천·횡성영월평창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크리스마스 및 신년 인사 트리 점등식도 진행됐다.

2023 11 28 ()

강원도민일보

01

강원·제주·세종·전북 연대 대한민국 지방시대 연다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

오영훈 제주지사 대표회장

재정 자율성 확대 결의문 채택

지방시대위 특례발굴 지원 약속

강원·제주·세종·전북이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협의회를 출범시키며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연대·협력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 논의가 가속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메가시티 등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간 합종연횡까지 본격화되면서 특별자치시도 공통분모를 갖게 된 4개 광역지자체가 공동연대에 나선 것이다.

강원과 제주, 세종, 내년 1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전북은 2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올해 초부터 특별지방정부의 위상제고, 재정·세제 분야 제도개선, 특별법 공동 대응 등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해온 4개 특별자치시도는 지난 7월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이

후 4개월 만에 연합 협의체를 구성, 보다 굳건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4개 시도 중 가장 먼저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오영훈 도지사가 대표회장으로 추대됐으며,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3개 시·도지사는 공동 회장을 맡게 됐다. 4개 시도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연 2회(3월·9월) 협의체 정기총회 및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강원·제주·세종·전북 시도지사들

은 △지방시대 선도모델 구현 △균형 발전 정책의 성공사례 확산 노력 △자치권과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협력 △재정·세제 자율성 확대를 담은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며 특별지방정부 모델의 고도화를 통한 대한민국 지방시대 선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다짐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무려 41년 동안 실현되지 못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난주 공식적으로 착공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런 부

분부터 하나하나 달라지면서 지역은 더욱 눈부신 발전을 이뤄내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 정부가 주도하는 자치 선도 모델 개발 및 지방정부 위상제고, 자율성 확대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가 선진 국가로 도약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내용"이라며 "지방시대위원회도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 발굴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세훈

▶ 관련기사 2면·사진 3면

2023 11 28 ()
02

강원도민일보

시·도지사 '연대' 강조... 정치권 '입법 지원' 약속

강원·제주·세종·전북 각오 다져
도출신 의원 지방시대 협력 한뜻

27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에서는 대한민국분권모델의 완성을 향한 특별자치시도지사들의 공동 연대 속에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권의 지원 약속이 공표됐다. 협의회를 중심으로 공통의 노력에 나서게 된 강원·제주·세종·전북 시도지사들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향후 협

의회 활동에 임하는 각오 및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북은 내년 1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 특별자치도가 제주·세종에 이어 3번째로 출범하게 된 것을 영화 '넘버3'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하나의 협력 체계 구축을 강조, 방청객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김 지사는 "저희 강원은 '넘버3'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영화에서 처럼 하나의 조직이 된 것"이라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우리 4개 시도가 조직을 이루게 됨으로써 허허벌판에 혼자 서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과 제주·강원·전북의 협력·상생은 지방주도의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협의회 통해 국가와 지역 사회의 발전을 기여하는 '두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내겠다"고 했고, 김관영 전북

도지사는 "특별자치는 중앙의 권한을 부여받아 지역 스스로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인 만큼, 4개 시도는 지방시대를 이끌 핵심이다.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협의회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정치권 인사들은 완전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입법 지원에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김기현당대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확고한 철학을 갖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방시대를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기호·노용호(이상 국민의힘)·허영(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도출신 의원들도 "포괄적 권한이양에 중앙 부처가 오픈 마인드로 동참해 주길 바라며, 균형발전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훈

2023 11 28 ()
03

강원도민일보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 강원과 제주, 세종, 내년 1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전북은 2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한기호·노용호(이상 국민의힘)·허영(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도출신 의원들 포함, 여야 정치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 11 28 ()

01

북 동부전선 GP 복원
한반도 군사 긴장 고조

북한이 9·19 군사합의로 파괴하거나 철수한 동부전선 등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 작업에 들어가고, 우리 군도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공언하고 나섰다. 북한의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발사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27일 군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전면 파괴 선언 다음날인 24일부터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GP 복원에 들어갔다. 군당국이 카메라와 열상장비로 촬영한 사진을 통해 북한군 동향을 공개한 곳은 9·19 군사합의 이후 파괴됐던 동부전선 소재의 한 GP다.

남북은 5년 전 체결한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에서 운영 중이던 각각 11개 GP 중 10개를 완전히 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은 보존했다. 이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GP는 북측이 160여개에서 150여개로, 남측은 60여개에서 50여개로 줄어든 상태였다. 북한군은 당시 파괴하거나 철수한 11개 GP에 병력을 투입해 감시소를 설치하고 진지를 구축했으며, 무반동총 등 중화기도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 관련기사 6면

江原日報

2023 11 28 ()

04

“전자철관 지원사업 논란, 도교육감 책임져야”

전교조 강원지부 성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전자철관 지원사업 논란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27일 성명을 내고 “전자철관 의혹에 대해 신경호 교육감이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책임자 문책, 공식 사과, 도교육청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교육에 대한 명예와 신뢰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추락한 강원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느슨해진 행정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육감 스스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의 예산 심의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등을 지켜보는 한편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강동휘기자

강원도민일보

북, 9·19 합의로 파괴한 GP에 병력 투입·감시소 설치

군당국 감시장비 촬영사진 공개
“파괴·철수 11개 GP 모두 유사”
최전방 군사긴장 고조 의도 풀이



국방부는 지난 24일 북한이 동부전선 최전방 소초(GP)에서 감시소를 복원하는 정황을 위성 촬영 장비와 열상감시장비(TOD) 등으로 포착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방부 제공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 조치에 착수했다. 우리군은 대응 조치를 즉각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군당국은 27일 북한군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한 비무장 지대(DMZ) 내 GP에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하고 감시소를 설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군 감시장비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군이 공개한 사진에는 △북한군 병력이 감시소를 설치하는 장면 △진지 외 무반동총으로 추정되는 중화기를 배치하는 장면 △병력이 야간 경계근

무를 서는 장면 등이 담겼다. 이 관계자는 “예전에 GP를 파괴하기 전에 경계 초소(감시소)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만드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안

목재를 만들고 얼음무늬로 도색했다”며 전했다. 군 관계자는 “(군사합의로) 파괴하거나 철수한 11개(북한군) GP 모두 유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1일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9·19 군사합의 중 우리 군의 최전방 감시,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 조항의 무효화를 22일 선언했다.

이에 북한은 지난 23일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면서 이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며 군사합의의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군이 이번에 철수 GP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군사합의 파기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최전방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북한군 GP 내 중화기에 대해서는 “무반동총과 유사한 무기도 식별되고 있다”며 “고사총 등도 현재 보이지 않을 뿐이지 다 들어오지 않았나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GP 복원 외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는 “해안포 개방이 많이 늘었다”며 “기존에는 평균 1개소에 2문 정도였는데, 지금은 많이 늘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입장 자료를 내고 “11월 24일부터 (북한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일부 군사 조치에 대한 복원 조치를 감행 중”이라며 파괴 및 철수 GP 11개소에 근무자를 투입하고 임시소소를 설치하고 중화기를 반입했으며, 서해 해안포 포문 개방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런 복원 조치에 대해 “대응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군은 북한의 도발행위를 예의주시하면서 강화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江原日報

허리띠 졸라매는 지자체 ... 강원경제 직격탄

재정안과 도내 7개 시·군 내년 당초예산 줄어

각종 사업 무산·축소 ... 자치단체 의존 높은 지역경제 휘청
경기 상황 크게 개선될 가능성 낮아 당분간 긴축 불가피
도 “재정 어렵지만 서민·약자 위한 복지는 과감히 투자”

내년 예산을 역대 최소 폭으로 늘린 정부 방침에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재정 한파에 지자체가 진행할 각종 사업 등이 무산되거나 축소 및 연기되면서 지자체 의존도가 높은 강원지역경제도 휘청이고 있다.

본보가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의 2024년 당초예산을 올해와 비교한 결과 강릉시(298억원 감소)와 홍천군(683억원 감소), 횡성군(257억원 감소), 양구군(211억원 감소), 인제군(298억원 감소), 고성군(257억원 감소), 양양군(96억원 감소) 등 7개 시·군이 예산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재정안정화 기금 등 372억원을 추가 투입해 201억원을 증액시킨 동해시를 더하면 사실상 예산을 줄인 자치단체는 더 늘어난다.

예산 규모를 늘린 강원자치도를 비롯한 11개 시·군의 상승 폭도 크

지 않다. 올해 대비 내년 예산과 관련, 삼척시가 가장 큰 폭인 8%(499억원), 원주시 5.49%(871억원), 영월군 5.1%(275억원) 등만이 5%를 넘겼다.

0.8%(630억원)를 올린 강원자치도를 포함한 나머지 시·군의 예산상승률은 5% 미만에 그쳤다. 평균군이 34억원(0.6%), 철원군

강원 지자체 당초예산 증감률 (단위: 억원)	2023년	2024년	증감률
강원도	75,232	75,862	0.8%
춘천시	16,007	16,305	1.87%
원주시	15,870	16,741	5.49%
강릉시	14,589	14,301	2%
속초시	4,955	4,959	0.08%
동해시	5,196	5,397	3.86%
삼척시	6,221	6,720	8%
태백시	5,126	5,196	1.4%
홍천군	7,846	7,163	8.7%
횡성군	5,935	5,678	4.3%
영월군	5,388	5,663	5.1%
평창군	6,059	6,093	0.6%
정선군	5,401	5,650	4.6%
철원군	5,564	5,580	0.29%
화천군	4,208	4,209	0.02%
양구군	4,189	3,978	5.04%
인제군	6,203	5,905	4.80%
고성군	4,337	4,079	5.94%
양양군	4,347	4,251	2.20%

이 16억원(0.29%), 화천군이 1억원(0.02%)을 각각 늘렸는데 올해 몰가

지수가 월평균 3%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감소 편성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복지 예산 등 고령 예산을 감안하면 실제 각 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이유는 ‘세수 감소’로 요약된다. 경제 약화와 수출 감소,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침체 등도 중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도는 내년에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 1,282억원, 취득세 1,638억원, 지방소비세 131억원 등 3,100억원 이상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

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재정 한파로 지출이 감소하면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 경제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여기에 내년에도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재정 한파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도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은 최악의 재정난이지만 어려움을 겪을 서민과 약자 계층을 위한 복지에 과감하게 투자했다”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2023 11 27 ()



배스·블루길·브라운송어까지...외래종에 잠식된 소양강

앵커

KBS는 소양강댐 건설 50주년을 맞아 소양강을 중심으로 한 내수면 생태계와 환경 정책의 방향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KBS 취재진이 10달에 걸쳐 추적한 소양강의 외래종 잠식 실태를 공개합니다.

고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양강 최상류의 계곡.

하얗게 부서지는 물거품 위로 열목어가 힘차게 도약합니다.

한반도에서만 볼 수 있는 '가는 돌고기'가 무리지어 노닐고, 은백색 줄무늬가 반짝이는 참갈겨니도 보입니다.

하지만 100여km 아래, 하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름도 낯선 '브라운송어'가 살기 시작하면서 손맛을 보려는 낚시꾼들의 성지가 됐습니다.

브라운송어는 세계 100대 침입 외래종으로, 몸 길이가 1m까지 자랍니다.

이제 소양강은 배스와 블루길, 브라운송어까지 3대 생태교란어종이 모두 발견되는 대한민국 유일한 하천이 됐습니다.

[김수환/국립생태원 선임연구원 : "만약에 (인위적으로) 옮겨지게 되면, 애들이 거기서도 적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애들이 확산이 될지를 저희가 가능할 수가 없어요."]

취재진은 강원대학교 어류연구센터와 10달에 걸쳐 브라운송어의 서식 실태를 추적했습니다.

기존에 서식지로 알려진 소양강댐 하류에서 9km 떨어진 춘천댐 아래에서까지 그물에 잡힙니다.

국립생태원이 추정 한 서식 범위보다 2배나 넓은 수준입니다.

[최재석/강원대학교 어류연구센터장 : "소양강에서 나온 개체들이 세력권을 확장을 하면서, 여기 그 춘천댐 밑에까지 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고..."]

브라운송어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취재진은 강물을 떠다 여기에서 나온 물고기의 DNA를 분석해 봤습니다.

무려 7종의 외래종 DNA가 검출됩니다.

강의 생태적 건강성을 보여주는 종 다양성도 현저히 떨어지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허정수/유전자분석업체 팀장 : "일반적으로 저희가 경험적으로 봤던 어떤 종 조성의 수가 한 120여 종이었는데 이번 시료들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50종의 어종이 검출..."]

특히, 이번 취재 과정에서는 브라운송어가 소양강을 벗어나 다른 수계에 서식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이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고순정 flyhigh@kbs.co.kr

강원도민일보

춘천시 기업혁신파크 공모 실사 준비 총력

국토부 내달 초 잠정 결정
연말 내 최종 선정지 발표
선정시 2030년까지 개발

1조원 규모의 기업혁신파크 지정을 위한 춘천시의 도전이 시작됐다. 춘천시는 이르면 내달 초로 예정된 기업혁신파크 실사에 대비,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7일 본지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의 춘천시 기업혁신파크 실사일정이 내달 초로 잠정 결정됐다. 국토부는

내달 초 기업혁신파크 실사를 마친 뒤 연말 내 기업혁신파크 최종 선정 지역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혁신파크는 춘천시가 민선7기 때부터 공을 들이고 있는 핵심 현안이다. 사업에 최종 선정될 경우 남산면 광판초교 일원이 대상지이며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9364억원을 들여 368만㎡ 부지에 민간주도의 복합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더존비즈온이 앵커기업을 맡고 IT와 바이오, AI-데이터가 결합한 지식첨단산업시설을 구축하고 연구시설과 상업·업무시설, 주거시설, 교육시설,

복합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기업혁신파크의 핵심사업은 바이오와 ICT다. 바이오의 경우 춘천이 30년 경험을 축적한 데다 ICT역시 지역특화사업이라는 점에서 춘천은 다른 지역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다. 강원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와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된 점, 다른 지역에 비해 재해가 적고 저온의 강물을 이용해 저비용 전력으로 안정적·효율적으로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350여 개 기업이 기업혁신파크 조성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

할 정도로 업계의 관심도 높다.
춘천시는 2021년 12월 더존비즈온·신한은행과 기업도시 조성사업 참여자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이듬해 기업도시 TF를 구성했다. 2년여 준비 끝에 최근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사업서를 제출했다.
실사를 일주일여 남겨두고 춘천시는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기업혁신파크는 춘천의 산업지형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며 “오랜기간 준비한 만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세현

강원도민일보

춘천시 민원행정 종합평가 ‘최우수상’

도, 18개 시·군 대상 선정
1년새 등급 두 계단 상승

춘천시가 강원도 18개 시군 민원 행정 분야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상을 받았다. 강원도는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시군 민원 행정 분야 종합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춘천은 민원 행정 제도 운영 및 활동 등 전 분야에 걸쳐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을 받았다. 2022년 평가에서 장려상 받았지만, 1년 만에 두 계단이나 올랐다. 춘천시는 민원 서비스 개선 분야 5개 항목, 민원 행정 제도 운영 및 활동 분야의 5개 항목에서 모두 만점에 가까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춘천시는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담당자에게 처리 기한을 알려주는 민원 처리 기한 예고제를 운영하고 시민의 소리 알림 등을 실시

했다. 민원 담당자 친절 교육을 1년에 2회 진행하고, 민원 품질 평가제를 통해 민원 만족도 제고에 힘써왔다. 전문가 무료상담실, 민원후견인제 등을 통해 민원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 애써왔다.

내년에는 민원콜센터를 설치한다. 도내에서 민원콜센터 설치는 4번째로 이를 통해 춘천시는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시장 취임 전 춘천시 민원 행정이 불신을 받고 있다는 말에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다”라며 “시민들이 더욱 친절해진 시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민원 행정 시스템을 관리하도록 하고 아울러 원칙과 투명함으로 바로서는 시정을 구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오세현

강원도민일보

2023 11 28 ()

/ 17

농촌-대도시 의료 불평등 해소를

-국립대의대 중심 지역 의사제, 지역 간호사제 실효적 정책 필요

고령화사회로 먼저 진입한 농촌에서 아픈 주민이 늘고 있는데도 도시보다 병의원을 찾기 힘듭니다. 강원도민일보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강원 18개 시군 환자의 거주지내 의료혜택이 가능한 자체 충족률을 조사한 결과 64%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더 열악한 경우는 입원입니다. 시군 평균 충족률이 27%에 불과합니다. 특히 군 단위 지역 중 아예 병상이 없는 양양과 고성을 비롯해 병상시설은 도내 특정 시에 몰려있습니다.

사는 지역을 벗어나 원거리 병원에 진료 및 입원하려면 비용도 비용이려니와 가족과의 생활 병행, 심리적 안정감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없습니다. 질환으로 야기되는 삶의 질이 도시에 비해 농촌 주민이 매우 불리합니다. 최근엔 농어촌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공중보건의사마저 눈에 띄게 빠지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도내 정원 145명인데 현원은 101명으로 충원율은 70% 정도입니다. 작년만 해도 130명이었는데 올해 29명이 빠졌습니다. 당장 30% 빈 곳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100개가까운 의원이 강원을 이탈했는데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강원지역 개원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의료 접근성이 열

악하면 현지 주민 삶 기반이 붕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청년과 중장년 등 타지 인구를 흡수하는데도 큰 걸림돌입니다. 고혈압과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의 지역 내 질환관리를 강화하는 지역간호사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이마저도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막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했으나, 현 시범사업은 원칙적으로 재진만 허용하는 것으로 축소됐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의료 공공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수준은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의료서비스가 공적자원이라는 생각에 동의하는 비율이 감염병 발생 전 22%에 불과했는데 발생 후 67%로 3배 이상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을 삼았습니다. 생활환경 기본은 생명과 직결된 의료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국립대인 강원대의대에 공공의사제 내지 지역 의사제를 도입하고, 강원대병원 은 군 단위 지역과 연계 진료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도내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비율도 획기적으로 높여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11 28 ()

/ 17

강원 자치경찰제 연착륙해야

-내년부터 시범 실시,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강원과 전북, 제주, 세종 지역에서 내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와 지역 간 경찰업무와 권한을 분리하는 이원화를 통해,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을 목전에 두고도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일선 경찰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민들의 우려도 큼니다. 안착 과정에서 경찰 행정에 차질을 빚는다면 피해를 주민들이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자치경찰 이원화의 핵심은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의 소속 여부와 예산·인사 독립권입니다. 현재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은 사실상 지역 경찰 업무를 하고 있지만 소속은 자치경찰이 아닌 112 치안종합상황실 소속입니다. 이원화가 되면 지자체가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자율성을 갖고,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는 자치경찰제 이원화가 어떤 방식

으로 진행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원화 후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이 검사 지휘를 받는 지, 국가수사본부 지시를 받는지 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채 경찰의 대대적인 조직개편만 이뤄지면서, 자치경찰 이원화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가 행정안전부에 문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12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고 해도, 총선 이후로 관련 논의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정책입니다. 치안 공백을 메우고, 지역 실정에 맞는 경찰 행정을 펴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계획이 지연될수록 치안 행정에 혼선이 발생하고 제도가 자리잡기 어렵습니다. 1달여를 앞두고도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마련하지 않은 정부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국가경찰과 지역 경찰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치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 재정 자립도가 낮은 강원도에서 이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3 11 28 ()

/ 19

수도권 기업 유치, '양보다 질'을 철저히 따져야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 한도를 최대 200억원까지 높이고 보조금 수령 기준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을 12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지난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중소기업이 보조금 수령을 위해 갖춰야 하는 신규 고용 최저 기준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된다.

정부의 방침은 지역의 기업 유치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크게는 지역 전체가 발전하고 일자리 창출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각 지역이 경쟁력을 갖춰 균형발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때문에 정부의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 대폭 상향 조정의 계획 취지나 동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이번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이는 낙후지역의 낙인을 지우고 전국이 고루 잘살게 되는 것에 일조한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제대로 된 역할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수도권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 강원특별자치도는 과거의 기업 유치 정책에 대한 철저한 복기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외지 기업 유치에 있어 실적에만 급급해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도 사전 검증이나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해 민원까지 빚어졌었다. 그리고 지역 향토 기업들은 상대적인 역차별을 느끼고 있어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 추진 소식에 도내 기업체협의회와

경제단체 등은 일제히 환영하면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즉, 정부의 이번 개정안을 통

정부, 이전 기업에 보조금 200억원까지 상향

“선호도 높은 지역 중심 ‘선택과 집중’으로

강원도,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는 기업 물색을”

해 사업장 이전을 검토하는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 이전과 투자 활성화가 이뤄져야 하지만 향토 기업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즉, 무분별한 기업 유치보다 목적과 지역의 색깔을 가지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쓸어 담기식 기업 유치에서 탈피, 단 1개의 기업이 이전되더라도 지역의 장기적인 전략과 판단이 필요하다.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수라는 얘기다. 도 전역을 대상으로 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기보다 현재 여건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지원 제도를 통한 양적 목표달성을 벗어나 질적 수준이 높은 우량 기업을 우선 유치해야 한다.

江原日報

2023 11 28 ()

/ 19

활개 치는 보이스피싱, 뿌리 뽑을 근본 대책 없나

사회 초년생인 20대들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도내 보이스피싱 사건은 588건으로 피해액은 108억원에 달했다. 피해자 588명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52%(303명)로 절반을 차지했다. 40~50대는 28%(164명), 60~70대는 15%(90명)였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들은 수사기관 사칭 전화에 쉽게 당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과거에는 주로 노인이나 주부였으나 요즘은 젊은 층의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대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인출이나 수거책으로 활동하다가 처벌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하부 조직원으로 일하다가 검거된 보이스피싱범은 올해 156명에 이른다. 경제난에 코로나19까지 겹쳐 고액의 아르바이트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실직자나 취준생뿐 아니라 비교적 사회적 지위가 있는 전문직 종사자까지 꼬일 정도다.

보이스피싱은 금융 당국이 대책을 내놓기 무섭게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이었지만, 대포통장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이체 방지책이 잇따르자 저리 대출 등을 핑계로 돈을 직접 받아 가로채는 대면편취수법이 등장했다.

여기에 이른바 '택배 사칭 문자(악성 코드 문자 메시지)' 등으로 개인 정보를 빼내고,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거짓말)'를 짜서 접근하는 방식도 성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피해자의 SNS 대화 기록으로 주변인 이름, 전·월세 계약 등 근황을 파악해 그럴듯하게 전화를 거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평생 모은 돈을 일순간에 잃게 만들고, 심지어는 가정 파괴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증가 추세다. 갈수록 대담하고 정교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을 방법이 시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입장에서는 누군가 걸려들기만 한다면 이보다 쉬운 돈벌이가 없다. 최근 조직 폭력배들이 눈을 돌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에 피해를 입은 사람을 쉽게 찾을 정도다. 피해자도 이제는 성별이나 특별한 연령대가 없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주의만으로는 힘들어 보이는 게 현실이다.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부를 도려내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디선가 계속되고 있는 범죄를 찾아 완전히 씨를 말려야 한다.